

재정건전성, 경제위기, 그리고 복지제도

2011년 12월 6일

이영(한양대)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논문의 목적은 재정건전성이 경제위기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사례 정리와 초기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정리하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어, 향후 재정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논거가 될 것이다. 경제위기 발생의 중요한 이유가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점은 자주 이야기 되고 있으나, 실증적인 증거의 제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제위기는 단기 유동성 부족이나 부동산 버블로 촉발되나 재정이 건전한 경우 위기까지 가지 않고 진화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또한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훼손의 한 가지 가능한 원인으로써 복지지출을 살펴보고 있다. 고소득 국가의 재정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복지분야이며, 중소득에서 고소득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분야도 복지분야이다. 이러한 복지분야 지출과 재정건전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복지지출이 높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나쁘다는 관계뿐 아니라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감소)시킨 국가에서 재정건전성이 훼손(개선)되는 관계도 관찰되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론

재정건전성과 재정위기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사례분석과 간략한 회귀분석이란 두가지 방법론을 사용한다. 첫째로, 재정건전성 훼손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였던 경제위기 사례들을 정리한다. 먼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있어서 재정건전성의 역할을 국가별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비교 정리한다. 2008년 리머브라더스 파산이후 경제위기가 전세계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1990년대중반 복지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였던 북구, 독일, 캐나다(2000년대) 등에서는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복지재정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약화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의 남유럽 국가들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대말에 있어서의 선진국들의 재정 현황을 정리하고, 1995년과 2007년 사이의 사회복지 지출의 변화를 살펴본다. 위기를 겪은 국가뿐 아니라 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함으로써 정교하지는 않지만 이중차감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적용한다. 유사한 방법론을 1980년대의 라틴 아메리카의 재정위기에도 적용하여 분석한다.

회귀분석은 국가채무와 경제성장을 살펴보았던 Reinhart and Rogoff(2011)의 방

법론을 적용하여, 국채/GDP가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경제위기를 촉발할 수 있음을 실증 분석한다. 이러한 실증분석에 있어서 누락변수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인데, 이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국제적인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이 낮으나 해외의 국채 및 달러화 수요로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국내의 높은 국채수요로 낮은 재정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 개방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아마도 재정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회귀식에서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거시경제에서 재정으로의 역의 인과 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도구변수법을 사용할 계획이다. 도구변수로는 재정정책에 대한 제도(재정준칙 등), 원유 생산, 전쟁 등을 시도할 계획이다.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간의 관계는 산포도와 상관계수를 통한 통계분석과 사례분석을 통해 간략히 분석하였다.

2. 문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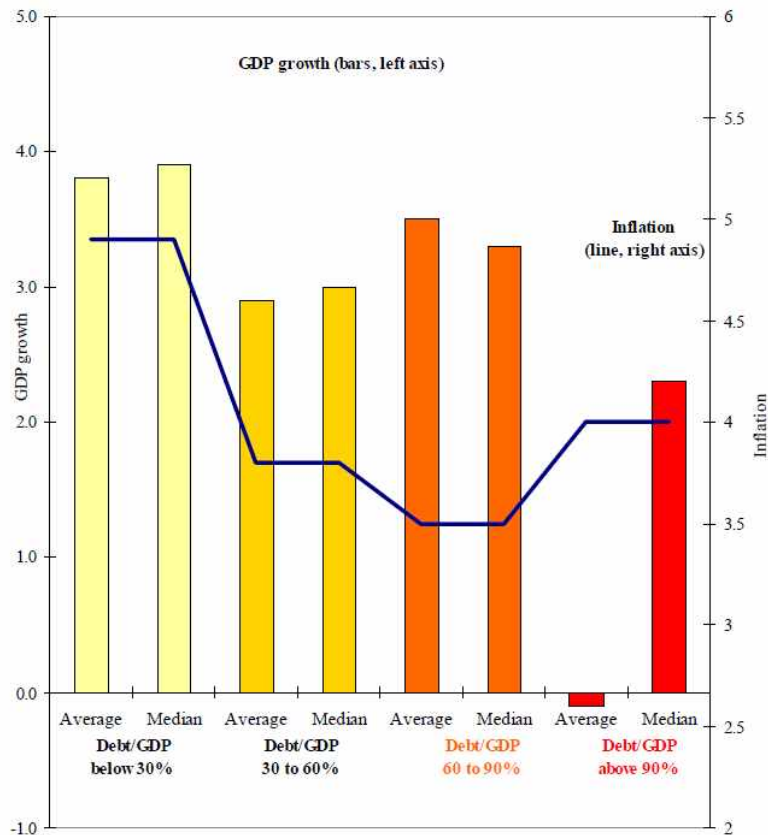
본 논문의 주제는 재정건전성과 경제위기인데, 이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거시경제에 대한 전체 문헌을 분류하여 정리하여 보자. 재정정책은 크게 보아 정부 규모, 재정건전성(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지출구성, 세수 구성 등의 4개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유사하게 거시경제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그리고 경제위기로 나누어 생각하자. 경제위기를 경기변동의 극단적 결과로 볼 수도 있지만, 원인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가지 차원으로 거시경제를 나누어 보자. 이렇게 재정정책과 거시경제를 3X4 행렬로 표현하면 양방향의 관계까지 생각하면 24개의 인과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표 1> 재정과 거시경제 간의 인과관계

	(1) 경제성장	(2) 경기변동	(3) 경제위기
(A) 재정건 전성	(↗A1) Reinhart & Rogoff (2010) (↘A1')	(↗A2) (↘A2')	(↗A3) 본 보고서 (↘A3') Reinhart & Rogoff (2009)
(B) 정부 규모	(↗B1) Barro(1991) (↘B1')	(↗B2) Fatas & Mihov(2001) Lee & Sung(2007) (↘B2')	(↗B3) (↘B3')
(C) 지출 구성	(↗C1) Barro(1997) (↘C1')	(↗C2) Lee & Sung(2007) (↘C2')	(↗C3) (↘C3')
(D) 세수 구성	(↗D1) Lee & Gordon('05) (↘D1') Lee & Gordon('05)	(↗D2) Lee & Sung(2007) (↘D2')	(↗D3) (↘D3')

문헌 조사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경제위기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림 1] 선진국의 국채와 경제성장, R & R (2010)



출처: Reinhart and Rogoff(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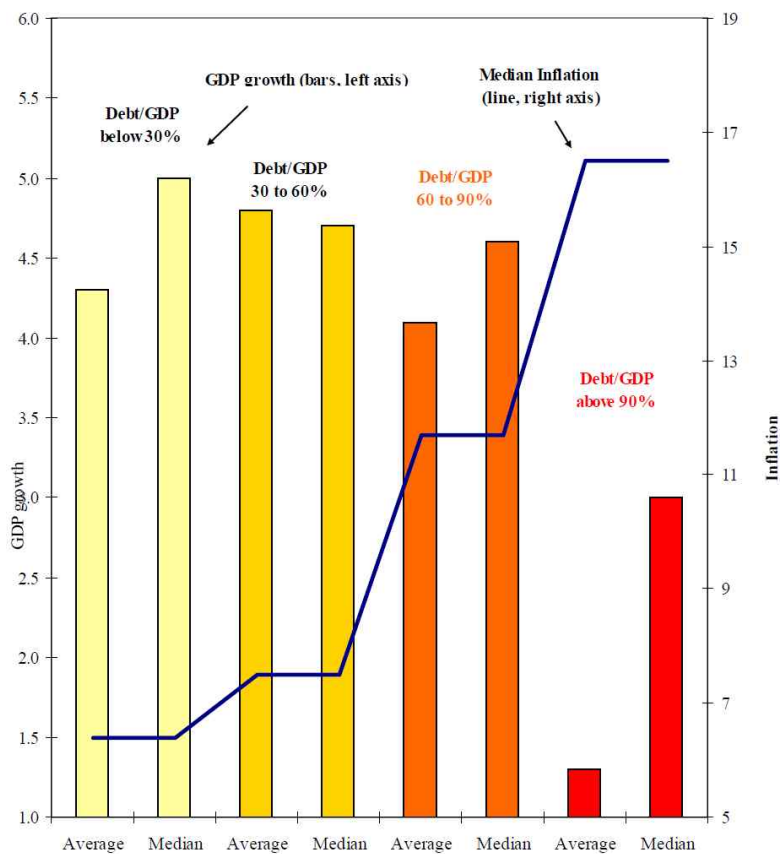
(↗A1) Reinhart and Rogoff(2010)은 국채 수준에 따라 경제성장의 성과가 다를 수 있음을 200여년에 걸친 44개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보여주고 있다. Reinhart and Rogoff(2010)이 사용한 방법론은 매우 간단하다. 국채 수준 30%, 60%, 90%를 임계치로 사용하고, 각 관찰점 별로 각 그룹으로 분류한 후 성장률의 평균값과 중앙값을 계산하였다. 20개 선진국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한 그림이 [그림 1]이다.¹⁾ 선진국의 경우 전체 관찰점은 1,180개로, 국채/GDP 30% 미만인 443개, 30-60%가 442개, 60-90%가 199개, 90% 초과가 96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은 국채 수준이 90% 미만일 경우 국채수준과 실질 GDP 성장률간의 상관관계가 약하며, 국채 수준이 90% 이상일 경우 성장률의 중앙값이 1%p 감소하며 평균값이 음으로 나타났다. 중앙값은 소폭 낮으나, 평균값이 음으로 나타났음은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극단치들이 많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위기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

1) 20개 선진국에는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Denmark,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Ireland, Italy, Japan,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pain, Swede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이 포함되어 있다.

서에서 시도하려고 하는 재정건전성의 경제위기에 대한 영향 분석에서 재정건전성이 낮은 경우(국가와 시기)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날 것임을 예견하게 해 준다.

신흥경제국(emerging economies)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한 것이 R&R(2010)에서 인용된 [그림 2]이다. 24개 신흥경제국의 경우 전체 관찰점은 1,142개로, 국채/GDP 30% 미만이 502개, 국채/GDP 30-60%가 385개, 국채/GDP 60-90%가 145개, 국채/GDP 90% 초과가 110개로 구성되어 있다.²⁾ 신흥경제국의 경우 임계치가 보다 낮아서 GDP대비 민간과 정부의 대외부채합이 60%를 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2%p 낮아지고, 90%를 넘게 되면 절반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부채와 인플레이션 간의 양의 관계는 신흥경제국에서만 관찰되었다.

[그림 2] 신흥경제국의 국채와 경제성장, R&R(2010)



출처: Reinhart and Rogoff(2010)

(ㄱB1) 정부 규모와 성장률에 대한 최초의 잘 알려진 논문은 Barro(1991)이다. Barro(1991)은 1960-1985년 사이의 95개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GDP 대

2) 24개 신흥경제국은 Argentina,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Ecuador, El Salvador, Ghana, India, Indonesia, Kenya, Korea, Malaysia, Mexico, Nigeria, Peru, Philippines, Singapore, South Africa, Sri Lanka, Thailand, Turkey, Uruguay, Venezuela 이다.

비 정부소비지출 규모와 GDP가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관찰하였다.

(↗B1') & (↘C1') 경제성장에 따라 정부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관찰된다. 소득수준에 높아짐에 따라 복지, 교육, 의료 등 정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른 정부 규모의 증가는 정부 규모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분석에 있어서 역방향의 인과관계가 적절히 통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C1) Barro(1997)는 교육이나 연구개발 그리고 보건지출은 자본을 축적하는 효과를 가져와 경상지출과는 달리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하였다. 한편, 사회보장지출에 대해서는 엇갈린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de Groot(2000)는 사회보장지출이 노동공급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왜곡적인 조세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Beletini and Ceroni(2000)에 의하면 사회보장지출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데 도움을 주게되므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하였다(김상헌 200#에서 재인용).

(↗D1) & (↘D1') Lee and Gordon(2005)는 세수구조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인소득세, 소비세, 조세부담률 등 여러 다른 조세 구조들과 함께 법인세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가 낮은 국가들의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대략적으로 법인세를 10%p 인하하게 되면, 연간 성장률이 1-2%p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횡단면뿐 아니라 종단면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분석 모형과 주변국 법인세율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도구변수 회귀분석에서도 법인세의 성장 촉진 효과가 관찰되었다. 법인세의 성장 촉진효과는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OECD 국가들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이 중요한 단계에서는 법인세의 성장 촉진 효과가 강하지만 총요소생산성이 중요해지는 선진국 단계에서는 단순히 법인세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Kneller 외(1999) 조세를 왜곡적 조세와 비왜곡적 조세로 구분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 결과, 전자는 음의 효과를 초래하고 후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김상헌 20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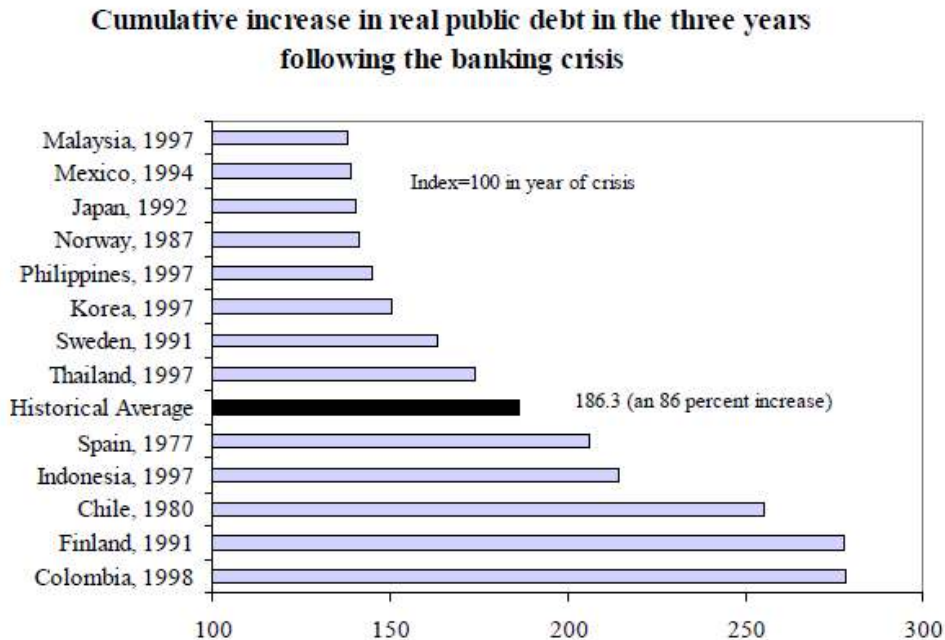
(↗B2) & (↘B2') Fatas and Mihov(2001)는 OECD 국가 데이터와 미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 규모와 경기변동간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논문은 개방도, GDP, 1인당 GDP, 평균 성장률 등을 통제한 이후에도 이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Lee and Sung(2007)도 유사한 방법으로 큰 정부가 작은 경기변동과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였다.

(↗C2) & (↘D2) Lee and Sung(2007)은 정부의 경상지출과 이전지출이 경기대응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도구변수법을 사용하여 관찰하고, 이전지출이 높은 국가에서 경기변동이 적음을 보였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국가에서 경기변동이 작음을 관찰하였지만, 세목별로는 아주 강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A3) Reinhart and Rogoff(2009)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에 나타나는 주요 현상들을 정리하였다. 자산시장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은 6년동안 실질가격이 35% 가량

하락하게 되며, 주식가격은 3.5년 동안 55%가 하락한다. 실물 경제에 있어서, 실업률은 4년동안 7%p 증가하고, 산출은 9% 감소한다. 국가재정에 있어서, 국가채무의 실질가치가 86% 증가하게 되고, 깊고 긴 경기 수축기에 발생한 세수 결손이 금융위기 이후 국채 증가와 재정수지 악화의 핵심 요인이 된다.

[그림 3]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R&R(2009)



출처: Reinhart and Rogoff(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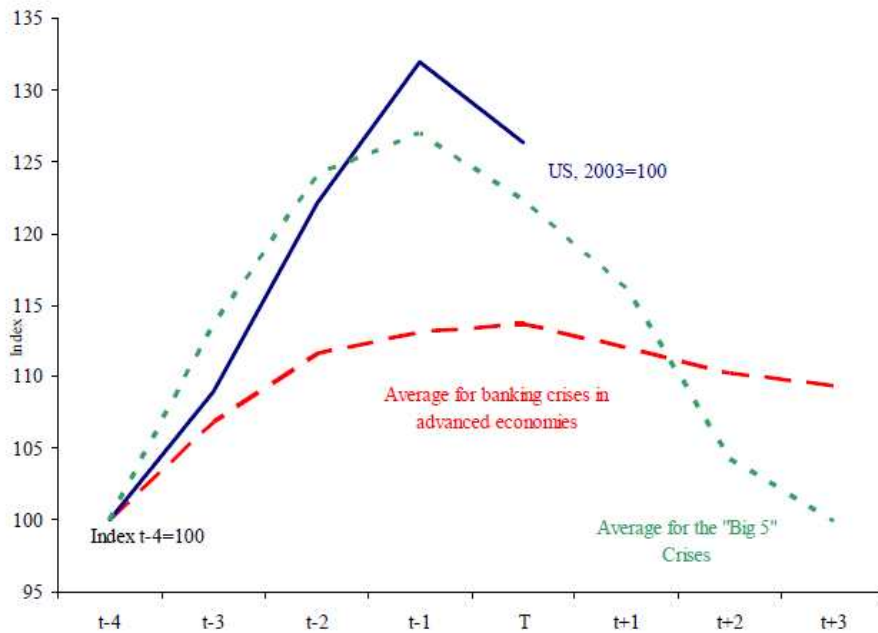
은행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는 매우 뚜렷하게 관찰된다. Reinhart and Rogoff(2009)는 재정건전성 지표로 GDP 대비 국채 대신 국채의 증가율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전자의 경우 은행위기의 영향이 분모인 GDP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은행위기 3년후 평균적으로 국채가 86%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그림 3).

Reinhart and Rogoff(2008)은 자산가격, 실물경제, 국가채무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경제위기 전후의 증상들을 정리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은 2007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선진국에서 발생한 최근의 최악의 은행위기 5 사례들과 비교하면서 논의하고 있다.³⁾ 자산가격에 있어서는 위기 이전에 버블이 관찰되는데, 부동산 가격과 주식가격들이 20-30% 가량 위기 발생이전 4년전에 비하여 위기발생시 상승해 있음이 관찰된다. 이러한 자산가격의 상승은 자본의 유입을 나타내 주는 증상으로, 유입된 자본이 빠르게 빠져 나가는 경우 위기가 실재화된다.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위기이전 역 V자형 중 하강기가 관찰된다. 5개 사례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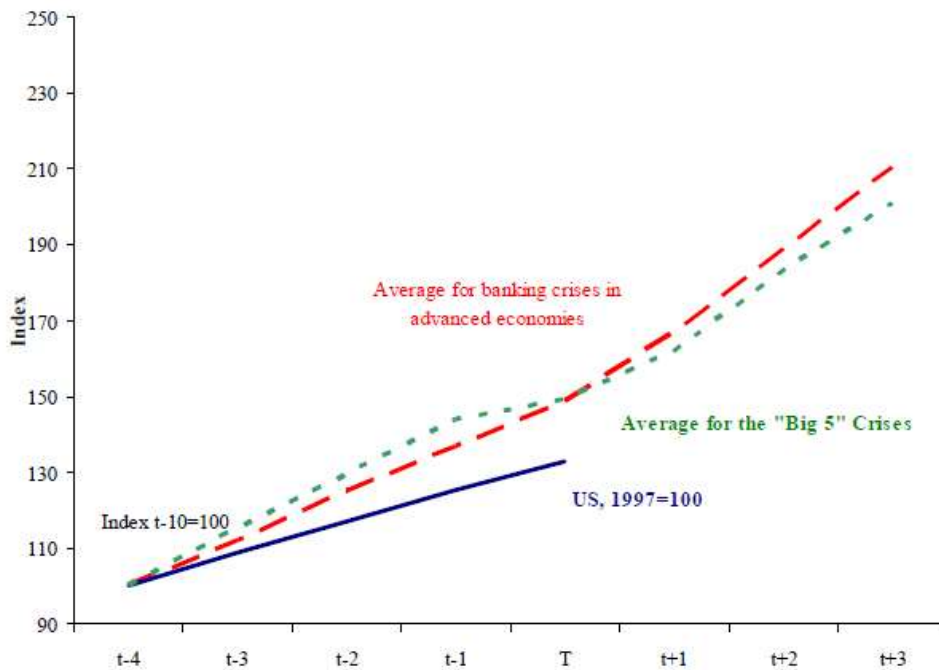
3) 비교대상 사례는 핀란드(1991), 노르웨이(1987), 스페인(1977), 스웨덴(1991), 일본(1992)이다.

[그림 4] 은행위기와 실질 부동산 가격



경제성장률이 위기 4년전 4.5% 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위기 직전 음으로 전환되었다. 재정건전성은 위기 4년전을 100으로 표준화시켰을 때, 위기시에 150% 정도로 50% 증가하였음이 관찰된다.

[그림 5] 경제위기와 재정건전성



출처: Reinhart and Rogoff(2008)

3. 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 데이터

데이터는 Rogoff and Reinhart(2009)와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WDI)에서 가져왔다. 은행위기, 재정위기, 국가채무 비율 등은 Rogoff and Reinhart(2009)에서 가져왔는데, 은행위기와 재정위기는 지속기간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시작한 시점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년도는 1950년이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WDI에서는 GDP, 재정지출, 재정수입 데이터들을 가져 왔다.

(2) 기초 통계 분석

먼저 은행위기와 재정위기 변수들을 살펴보자.

<표 2> 년대별, 지역별 재정위기 발생 빈도

	Africa	Asia	Europe & Westerner	Latin America	Middle East	합계
1950	0	1	0	2	0	3
1960	1	2	0	7	0	10
1970	0	1	1	5	0	7
1980	9	3	4	24	3	43
1990	3	1	2	4	1	11
2000	5	2	0	7	0	14
합계	18	10	7	49	4	88

1950년 이후 재정위기는 총 88회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년대별로 보면 1980년대에 전체의 절반정도인 43회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이외 지역중에서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번히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는데,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시기적으로 1980년대에 가장 빈번하게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국가별로 발생 빈도를 살펴보면,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나이지리아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5-6회의 재정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가 아닌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빈번한 4회의 재정위기가 발생하였다. 부록 1에 시기별, 지역별 재정위기 발생 사례들을 정리하였다.

<표 3> 재정위기 발생 빈도별 국가 사례, 1950-2010

위기 발생 빈도	국가
6	Chile
5	Argentina, Nigeria, Peru
4	Costa Rica, Indonesia, Uruguay, Venezuela

3	Bolivia, Brazil, Ecuador, India, Panama, South Africa
2	Central African Republic, Cote d'Ivoire, Dominican Republic, Guatemala, Kenya, Morocco, Paraguay, Romania, Russia, Sri Lanka, Turkey, Zimbabwe
1	Algeria, Angola, Egypt, Honduras, Mexico, Nicaragua, Philippines, Poland, Zambia

이제 은행위기를 살펴보자. 1950년 이후 은행위기는 총 160회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연대별로 보면 1990년대에 전체의 절반정도인 82회 발생하였다. 재정위기와 달리 은행위기는 서구,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대별, 지역별 은행위기 발생 빈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과 서구	라틴 아메리카	중동	합계
1960	0	0	0	1	0	1
1970	2	0	3	3	1	9
1980	18	10	8	15	4	55
1990	22	13	25	16	6	82
2000	0	0	6	7	0	13
합계	42	23	42	42	11	160

핵심 독립변수인 GDP 대비 국채 비율을 살펴보자. 국가별로 가용한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별로 변동과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추이를 먼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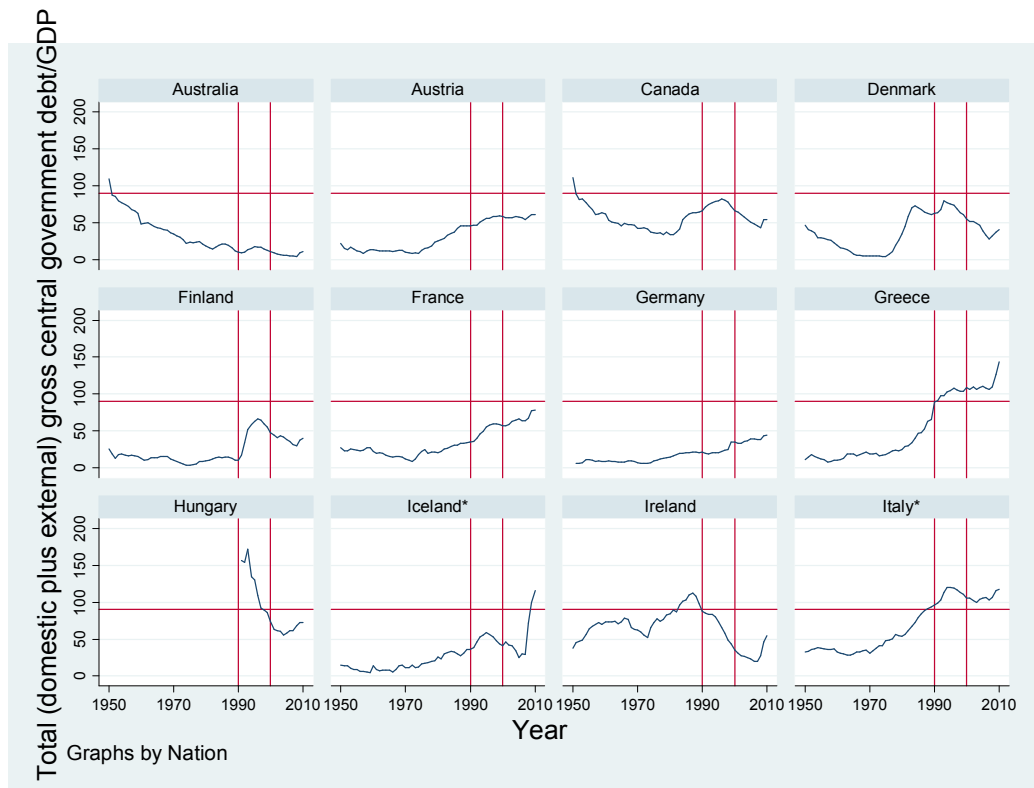
서구 국가들의 경우 국가별로 매우 다른 추이들을 보이고 있다. 몇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관찰된다. 최근에는 R&R(2009)가 위험수준으로 정의한 90%를 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성공적으로 국채 수준을 낮추고 있다. 독일의 경우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50% 미만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국가채무 수준이 높아져 80% 내외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의 북구 국가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채 수준을 성공적으로 낮추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지속적이고 빠르게 국채가 증가하여 150%에 이르고 있어, 높은 국채 수준이 최근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8]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국채 추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국채 수준이 매우 높고 R&R(2009)의 임계치인 90%를 넘는 경우도 자주 관찰된다. Colombia, El Salvador는 [그림 8]에 포함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의 국채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높지 않음이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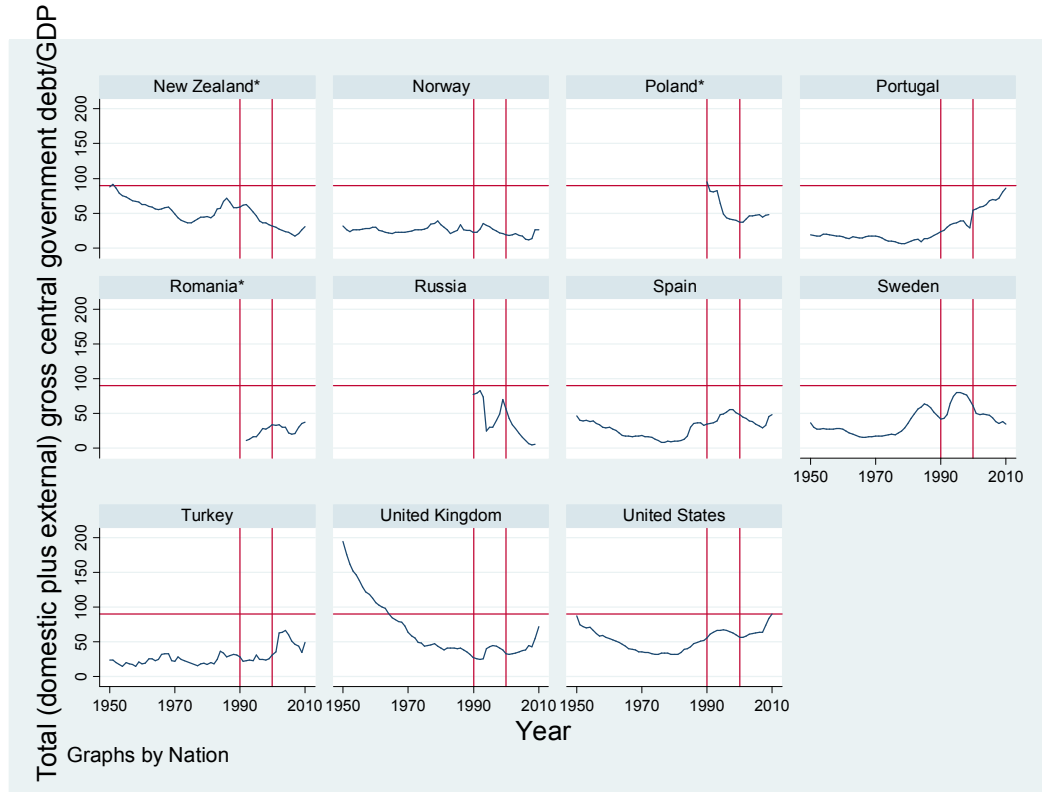
한국, 대만, 태국 등이 50% 미만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초 100% 수준을 보이던 인도네시아가 40%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높은 국채 수준을 보였던 말레이시아가 50% 내외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일본과 스리랑카가 매우 높은 국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제 재정위기와 국채 비율간의 관계를 살펴보자. 예상한 바와 같이 재정위기는 동기의 국채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채 비율과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재정위기가 은행위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위기가 재정건전성 훼손이 충분조건임에 비하여 은행위기는 재정건전성이 훼손이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닌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재정위기와 이전의 국채 비율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10% 수준에서 전혀 유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반대로, 재정위기와 이후의 국채 비율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정위기가 재정건전성의 훼손으로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은행위기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국채 비율은 은행위기 발생 이후 재정위기 발생 이후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이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훼손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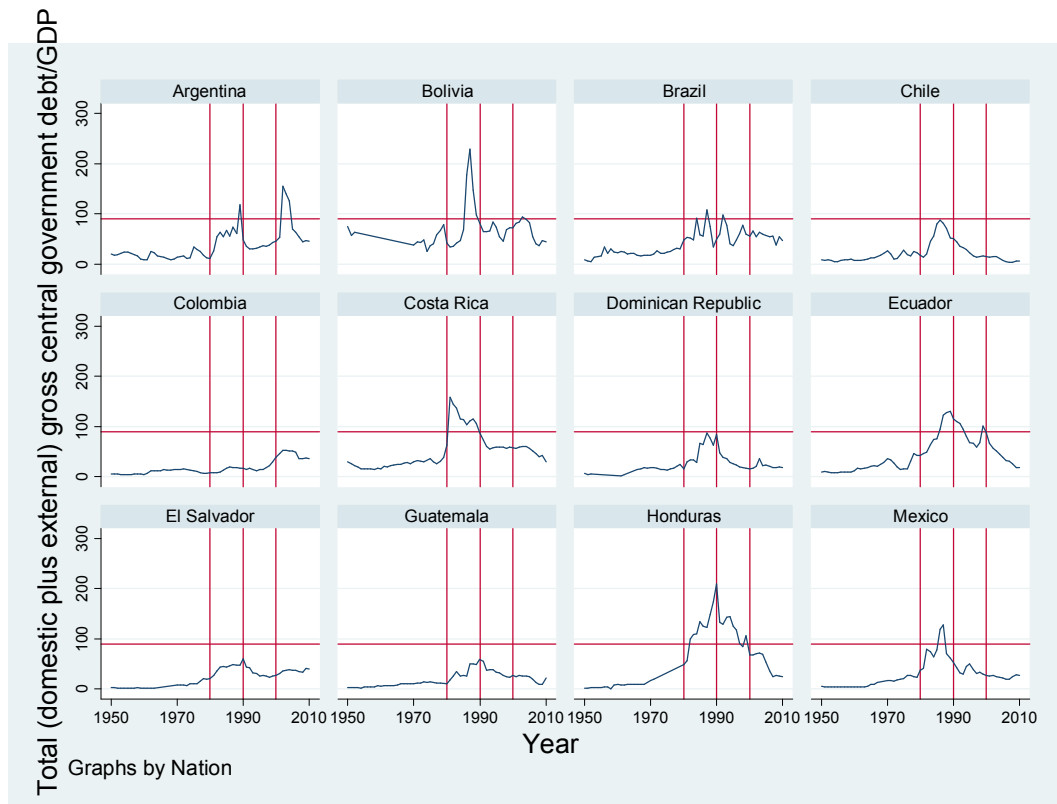
[그림 6] 국가별 GDP 대비 중앙정부 국가채무, 서구 국가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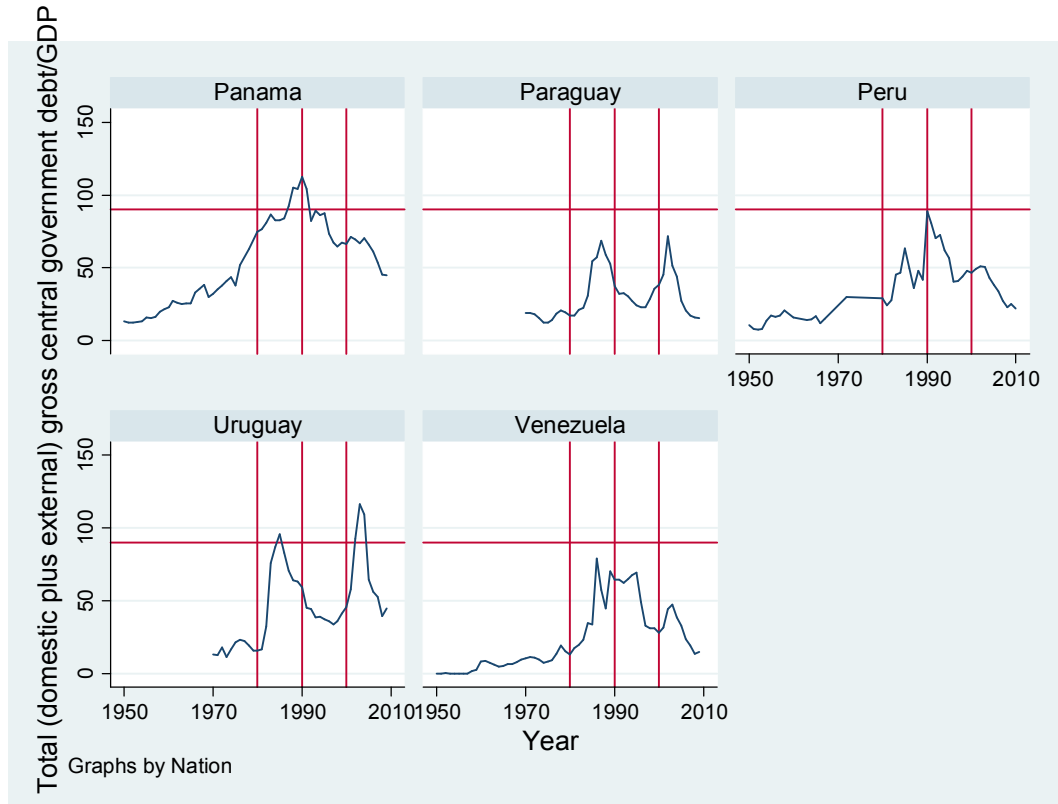
[그림 7] 국가별 GDP 대비 중앙정부 국가채무, 서구 국가 N-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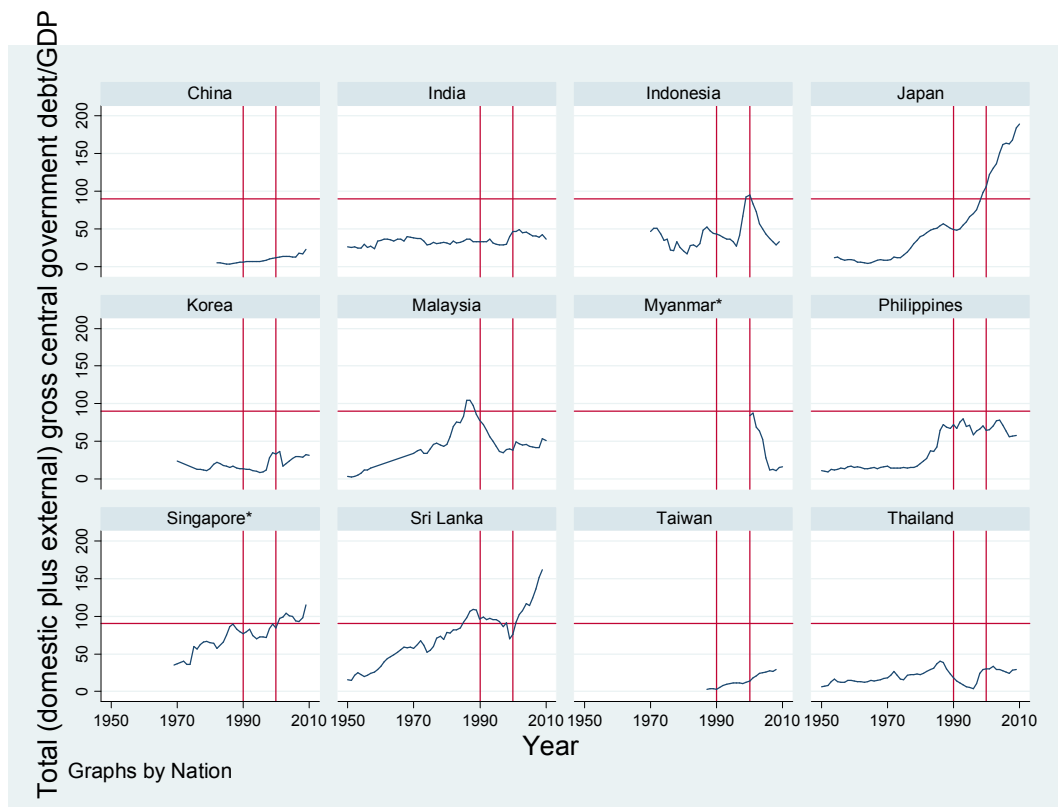
[그림 8] 국가별 GDP 대비 중앙정부 국가채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A-M



[그림 9] 국가별 GDP 대비 중앙정부 국가채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P-V



[그림 10] 국가별 GDP 대비 중앙정부 국가채무, 아시아 국가들



이러한 상관관계 분석은 재정위기, 은행위기, 국채 비율 간에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재정위기와 은행위기에서 국채 비율로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높은 국채 비율이 재정위기와 은행위기의 원인이 됨을 통계적으로 보이지 못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는 위기 발생 이후 여러 년도를 위기 기간으로 잡을 경우 위기와 국채 수준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잡힐 것이나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위기에서 국채 수준으로의 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의 논문에서 보이고자 하는 국채 수준에서 위기로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채 수준에서 위기로의 인과관계를 보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첫째는 국채 수준에 영향을 주나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도구변수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도구변수 후보로는 재정 제도, 지난 기의 국채 수준, 원유와 같은 낮은 비용의 자원 존재 여부, 부가가치세 도입과 같은 자원 마련의 비용효율성 영향 요인, 고령화와 같은 지출 요인 등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도구변수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둘째는, 위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발생하는 역의 인과관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관찰점들을 제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초기 결과가 다음 항에 보고되어 있다.

<표 5> 재정위기, 은행위기, 국채 비율간의 상관관계

	재정위기	은행위기	중앙정부국채/GDP
재정위기	1		
은행위기	0.0434*	1	
중앙정부국채/GDP	0.0405*	0.0297*	1
L.중앙정부국채/GDP	0.0273	0.0228	0.9156*
L2.중앙정부국채/GDP	0.0196	0.0125	0.7964*
L3.중앙정부국채/GDP	0.0082	0.0116	0.7107*
L4.중앙정부국채/GDP	-0.0064	0.0083	0.6356*
L5.중앙정부국채/GDP	-0.0099	0.0148	0.5463*
F.중앙정부국채/GDP	0.0519*	0.0464*	0.9156*
F2.중앙정부국채/GDP	0.0493*	0.0800*	0.7964*
F3.중앙정부국채/GDP	0.0625*	0.0746*	0.7107*
F4.중앙정부국채/GDP	0.0409*	0.0587*	0.6356*
F5.중앙정부국채/GDP	0.0341*	0.0539*	0.5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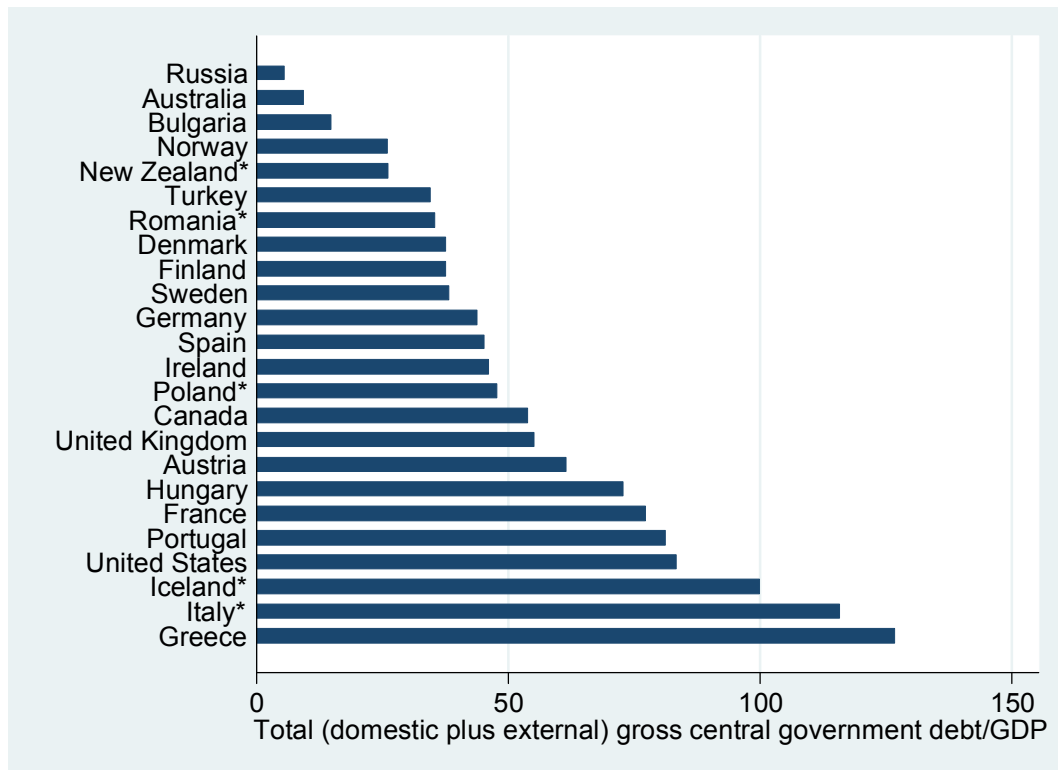
(3) 사례 분석

가.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

2008년 리머브라더스 파산이후 경제위기가 전세계로 퍼져가는 과정에서, 1990년대 중반 복지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였던 북구, 독일, 캐나다(2000년대) 등에서

는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고 복지재정이 증가하고 재정건전성이 약화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의 남유럽 국가들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것으로 관찰된다.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대말에 있어서의 선진국들의 재정 현황을 정리하고, 1995년과 2007년 사이의 사회복지 지출의 변화를 살펴본다. 위기를 겪은 국가뿐 아니라 위기를 겪지 않은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을 비교함으로써 정교하지는 않지만 이중차감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적용한다. 유사한 방법론을 1980년대의 라틴 아메리카의 재정위기에도 적용하여 분석한다.

[그림 11] 남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국가별 국채/GDP 규모, 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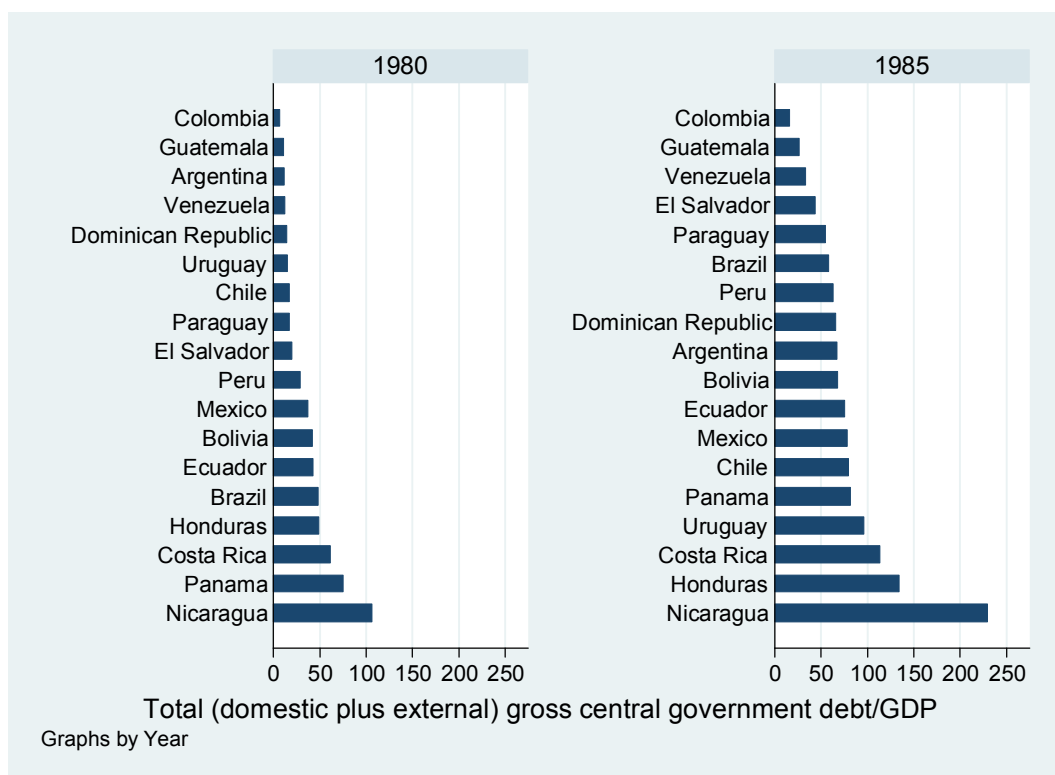


[그림 11]은 남유럽 재정위기 발생 직전인 2009년의 주요 서구 국가들의 GDP 대비 국채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국가들중 현재 재정위기로 국제기구의 개입이 이루어 지거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 국채 수준이 매우 높은 것이 관찰된다. 2011년 11월 현재 그리스는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상태이고, 이태리의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에도 독일에 비하여 국채 이자율 수준이 2배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1]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거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이 바로 국가채무 수준이 높은 국가들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나. 1980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재정위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에 거의 모든 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었다. 예외적으로 재정위기를 겪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가 유일하다. 이들 두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국채 수준을 낮게 유지하였음이 관찰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건전성이 이들 두 국가가 주변 여러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져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그림 12]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국채 비율, 1980년과 198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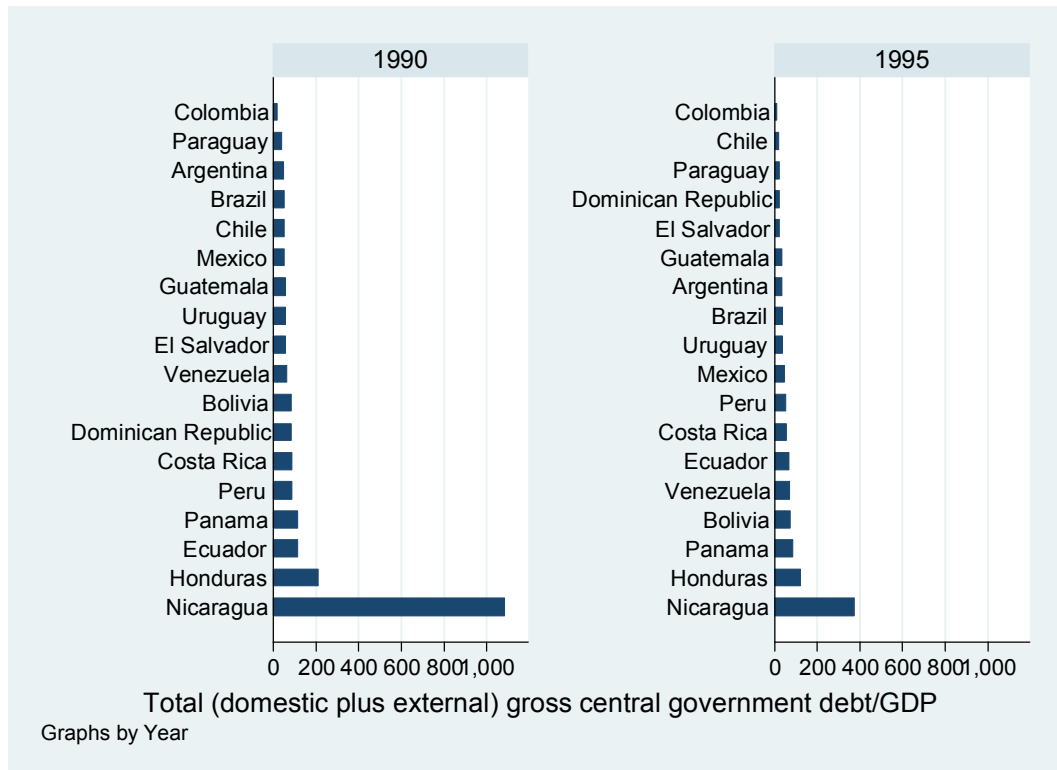


(4) 회귀분석

<표 6> 기초 통계치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재정위기 더미	2902	0.018	0.131	0	1
은행위기 더미	2902	0.030	0.170	0	1
국채 / GDP	2902	44.97	54.08	0	1209

[그림 13]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국채 비율, 1990년과 1995년



더미 변수인 재정위기 발생 또는 은행위기 발생을 국채 비율과 지역 더미에 Probit 회귀를 적용하였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체 표본과 위기후 1-5년을 제외한 표본의 두가지 표본을 사용하였다. 재정위기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전체 표본과 제한된 표본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왔으며, 지역 더미들을 추가한 경우 국채비율의 통계적 유의성이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은행위기에 대한 회귀분석에서는 제한된 표본에서 국채 비율의 통계적 유의성은 매우 높아졌으며, 지역 더미를 통제한 이후에도 국채 비율은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하였다.

회귀분석은 아직 초기 결과이기는 하나, 재정건전성이 낮은 국가와 시기에 재정위기와 은행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음이 관찰되었다.

<표 7> 재정위기와 은행위기의 결정 요인, Prob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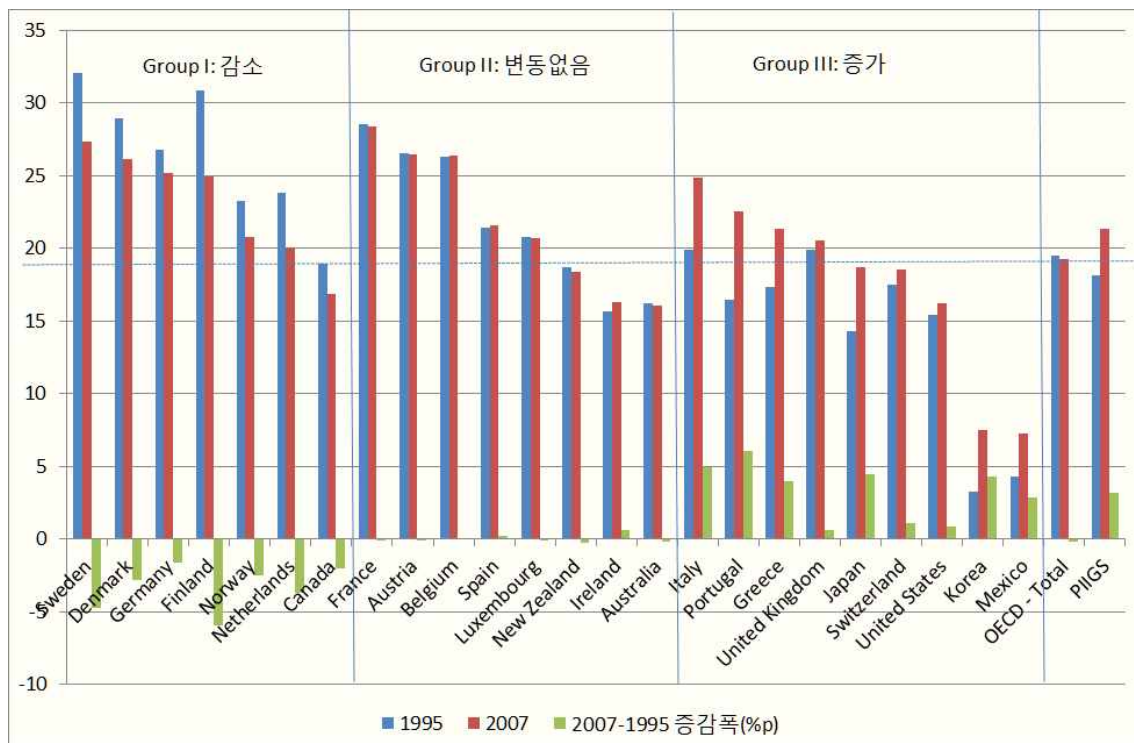
독립변수 표본	(1)	(2)	(3)	(4)	(5)	(6)
	재정위기			은행위기		
	전체	위기후 1-5년 제외		전체	위기후 1-5년 제외	
국채 / GDP	0.001	0.001	0.001	0.001	0.002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CntGrp==Asia			0.503			0.141
			(0.250)*			(0.140)
CntGrp==Africa			0.975			0.058
			(0.233)**			(0.165)
CntGrp==Middle East			0.689			-0.013
			(0.340)*			(0.261)
CntGrp==Latin America			1.066			0.239
			(0.203)**			(0.114)*
Constant	-2.066	-2.182	-2.865	-1.917	-1.955	-2.061
	(0.059)**	(0.066)**	(0.187)**	(0.054)**	(0.062)**	(0.088)**
Observations	3230	2902	2902	3230	2746	2746

4. 재정건전성과 복지지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1) OECD 국가들에 대한 사례 분석

어떤 국가들이 높은 국가채무 수준을 보이는 것은 그 이전 기간 동안 재정수지 적자가 상당히 지속됨으로 인해 국채 수준이 증가하였을 것임을 의미한다. 유럽 사례분석에서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의 국채 수준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사이에 빠르게 증가하였음이 [그림 6]과 [그림 7]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국채 수준의 빠른 증가는 이전 기간 동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재정운영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선진국들에 있어서 재정지출이 주로 복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이 복지 분야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큼을 고려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 사이의 국가별 복지지출의 증감을 살펴본다.

[그림 14] 주요 선진국의 복지지출/GDP 의 변화, 1995-2007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 사이 선진국의 복지지출/GDP의 변화를 살펴보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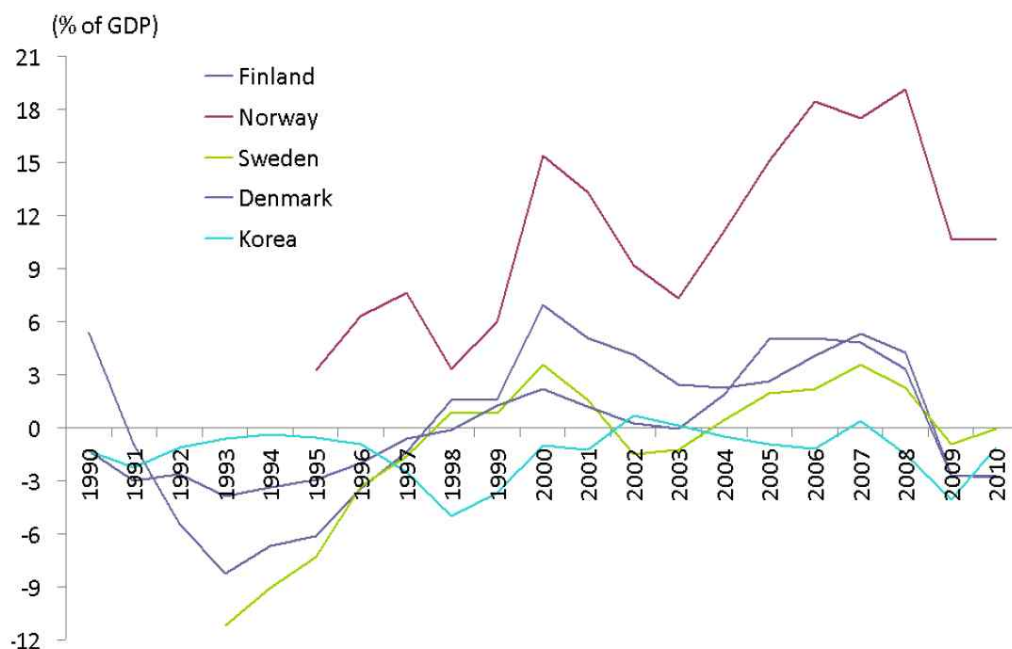
① 먼저 북구 국가, 독일, 캐나다 등 국가에서 관찰되는 복지 지출 축소이다. 북구 국가에서 복지제도의 구조조정(축소)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여러 국가에서 복지재정의 축소가 추진되고 있다. [그림 6]에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구 국가에서 1995년과 2007년 사이 복지지출/GDP 비중이 5%p

내외로 크게 축소되었음이 관찰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0년대 초반에 1930년대 대공황이후 가장 격심한 금융위기를 겪었다. 1980년대에 핀란드는 금융자유화 조치를 취하였고, 은행들은 단기차입으로 장기투자를 하는 위험한 행태를 보였고 1990년대 초반 은행위기로 연결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고용률이 10% 가량 하락하였고, GDP는 3년 동안 5% 감소하였다. 스웨덴 정부는 은행의 1/4 가량을 국유화하였다. 이러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북구국가 정부들은 복지제도를 개혁하여 복지지출을 5% 내외 감소시켰다. 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이들 북구국가들의 재정수지는 1990년대 중반이후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그림 15), 국가채무는 감소하고 있다(그림 6, 7). 이번 남유럽 재정위기가 북구 국가들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재정건전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주장될 수 있다. 2000년대 독일과 캐나다도 재정건전성 회복과 경제건실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②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과 같은 복지지출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국가 그룹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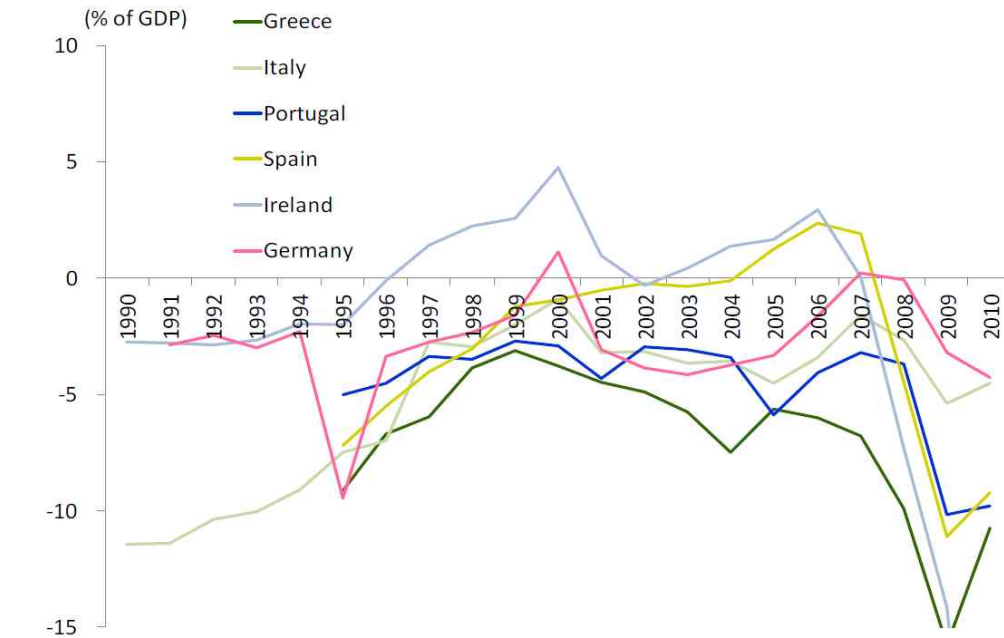
③ 이태리, 포르투갈, 그리스, 일본 등과 같은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한 그룹이 존재한다. 이태리의 경우 복지지출/GDP가 1995년 21%에서 2007년 25%로 4%p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포르투갈과 그리스의 경우 1995년 OECD 평균보다 낮은 복지비 지출에서 2007년 더 높은 복지비 지출로 변화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재정수지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그림 16), 국가채무도 증가하였다(그림 6, 7). 이들 국가들은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발전애 따른 지출 증가로 볼 수 있다. 너무 빠르고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준을 넘는 복지비의 증가는 지양하여야 한다.

[그림 15] 재정수지의 추이, OECD 일부 국가 1990-2010



출처: 고영선(2011)

[그림 16] 재정수지의 추이, OECD 일부 국가 1990-2010



출처: 고영선(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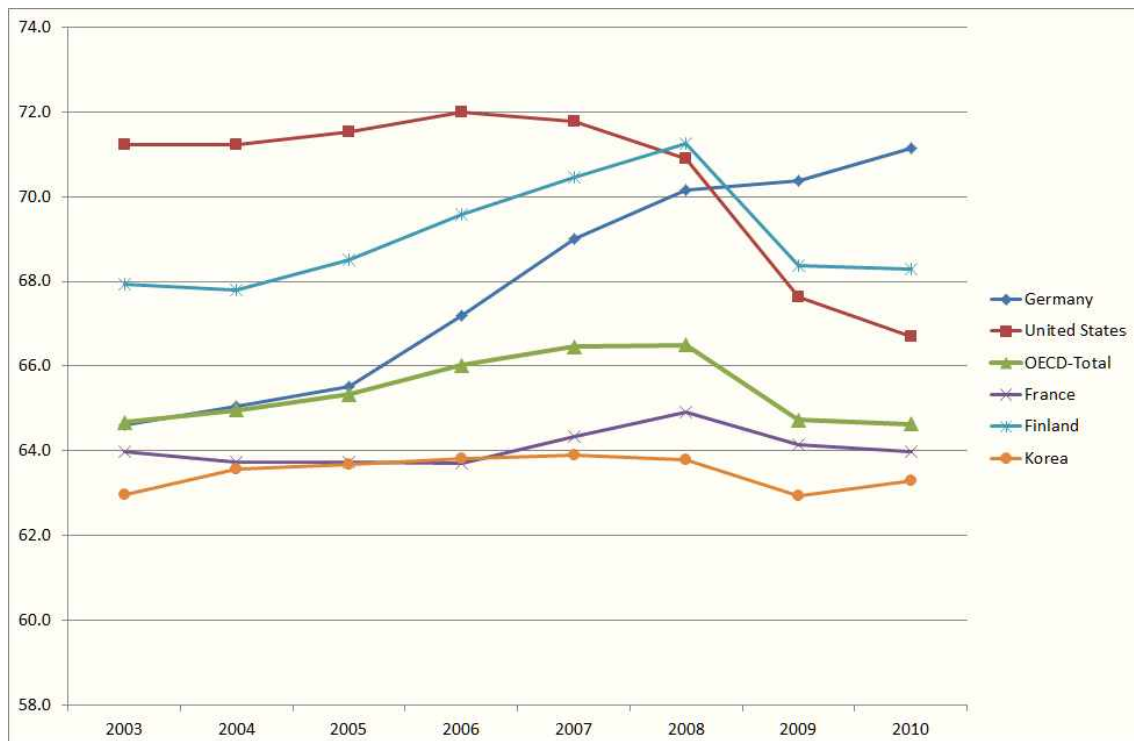
(2) 독일의 2002-2004년 Hartz 개혁 사례

독일의 경우 2002-2004년 사이에 Hartz 개혁이라고 불리는 복지제도 개혁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고용률을 증가시켰다.⁴⁾ 폭스바겐의 인사담당자였던 Peter Hartz가 독일의 노동시장현대서비스위원회(the Committee for Modern Services in the Labour Market)의 위원장으로 2002년 부임하면서 그 당시의 고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수당 감축, 고용형태 다양화, 고용센터 확대, 창업 지원 확대, 훈련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개혁은 2003년 12월에 입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된 장기실업자중 근로능력자와 근로능력상실자를 분리하고 보조금을 낮춘 정책이다. 2005년 이전에는 실업수당이 12-36개월 동안 주어지고, 실업수당 지급 기간 이후에는 최종 순임금의 53-57% 수준으로 정해진 실업 보조금이 지급되었었다. 이러한 실업수당은 2006년 이후에는 12개월(55세이상에 대해서는 18개월)로 제한되었으며, 이후에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매우 낮은 수준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일정한 조건에는 적절한 직장이 주어진 경우 수급자는 이러한 직장을 수용하여 근무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혁으로 연방정부의 실업담당 부처와 지역정부의 복지담당 부처가 결합되게 되었다. 이러한 결합으로 실업자가 직장을 찾고 경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례관리가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4) 관련 내용은 위키디피아, 미국 National Public Ratio로부터 정리되었다.

이러한 Hartz 개혁이 실시된 이후 독일의 사회복지지출은 2005년 27%에서 2007년 25%로 2%p 하락하였다. 좀더 장기적인 사회복지지출을 살펴보아야 하나 아직까지 국제 비교가능한 사회복지지출 데이터가 2007년까지밖에 가용하지 못하여 Hartz 개혁으로 복지지출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는데에는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Hartz 개혁과 관련하여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은 고용률 추이이다.

<그림 17> 독일과 주요 국가의 고용률 추이, 2003-2010



출처: OECD 데이터(Employment and Labour markets: Key tables from OECD - ISSN 2075-2342-OECD 20011)

<그림 17>는 독일과 주요 OECD 국가들의 2003년이후의 고용률 추이를 보여 주고 있다. 독일은 고용률이 2003년 65% 수준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10년에는 OECD 국가들중에서 최고 수준인 71%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은 2003년과 2010년에 모두 65%를 조금 못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중차감법적인 해석을 해 보면, 독일의 고용률이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되었음은 Hartz 개혁에 힘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고용률이 매우 낮은 63-6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독일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2000년대 후반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

만, 이러한 Hartz 개혁에 대한 비판도 많이 존재한다. 실업급여의 감소로 이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으며, 실업률의 감소도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3) 재정건전성과 복지지출에 대한 초기 회귀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재정건전성과 복지지출 간의 관계에 대한 초기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고한다. 재정건전성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채무 수준으로 측정하였고, 복지지출은 OECD의 사회복지지출을 사용하였다. 국가채무 수준과 복지지출 수준과의 상관관계와 국가채무 증가량과 복지지출 증가량 간의 상관관계를 각각 살펴보았다. 가용한 데이터가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2007년이기 때문에 5년간의 변화량들을 살펴보았고, 동일한 표본을 사용하기 위하여 수준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때에도 1985, 1990, 1995, 2000, 2005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각 년도별로 평균 22여개의 국가의 관찰점이 가용하여 총 110개의 관찰점이 사용되었다.

<표 8> 재정건전성과 사회복지지출 회귀식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Variable	Obs	Mean	Std. Dev.	Min	Max
국채/GDP	110	49.10	28.07	5.70	162.10
5년간 변화량	110	2.54	17.38	-45.80	55.60
사회보장지출/GDP	110	18.91	6.70	3.10	32.00
5년간 변화량	110	1.09	2.26	-6.60	7.70

<표 9> 사회복지지출을 이용한 국가채무 회귀식

	(1)	(2)
	Delta Debt, OLS	Debt, OLS
SOCXD	2.355	
	(0.706)**	
SOCX		0.983
		(0.392)*
Constant	-0.033	30.498
	(1.763)	(7.854)**
Observations	110	110
R-squared	0.093	0.055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significant at 10%;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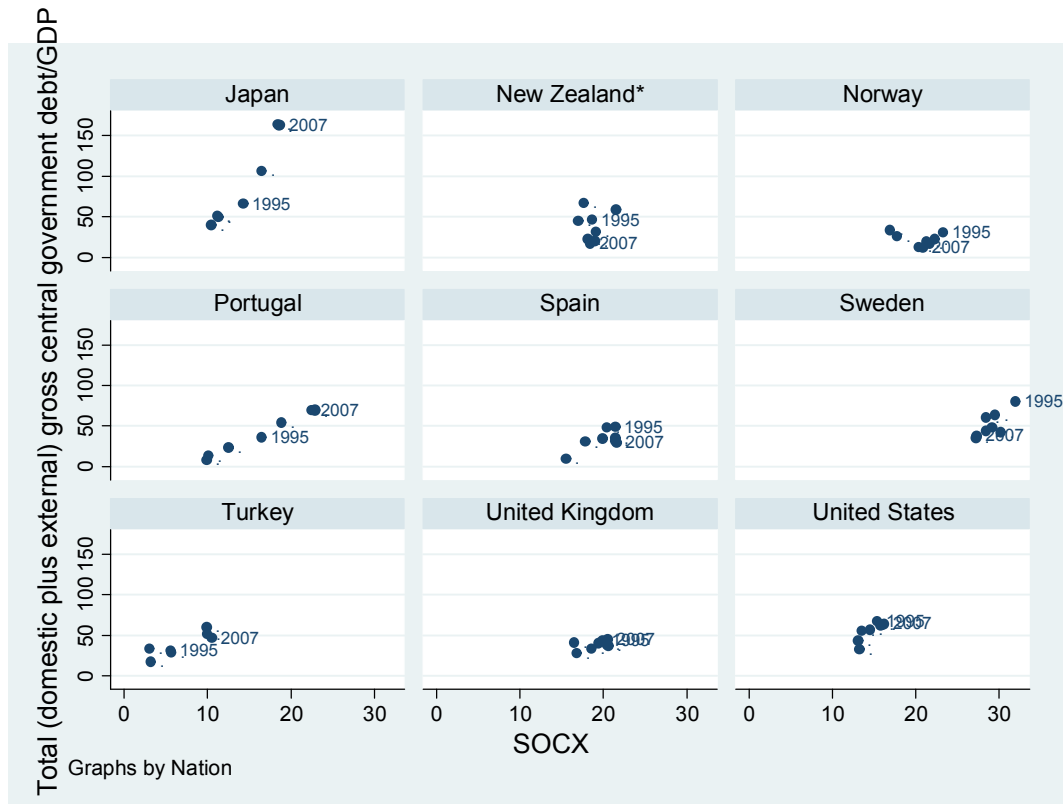
회귀분석의 결과, 국채 수준이 사회복지 지출 수준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채 변화량과 사회복지지출 변화량의 관계는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의 상관관계는 한 국가내에서의 시계열 자료를 보면 많은 국가에서 확인된다(그림 18과 19).

변화량간의 상관관계는 그림 20에 보고되어 있다. 변화량 0을 기준으로 4 사분면으로 나누어 보면, 1사분면에 가장 많은 관찰점이 모여 있음이 관찰된다. 1 사분면의 관찰점들은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고 동시에 국가채무도 증가한 경우이다. 1 사분면의 반대편인 3 사분면에도 몇몇 관찰점들이 관찰되는데, 이들 관찰점들은 앞에서 지적인 복지개혁과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 개선 사례들이다. 관찰점들은 이러한 1, 3 사분면 외에도 4 사분면에도 많이 존재하는데, 이곳에 존재하는 관찰점들은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키지 않고 복지지출을 증가시킨 사례들로 기록될 수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와 같이 여전히 경제·사회 발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4사분면에 위치하도록 사회보장지출과 재정건전성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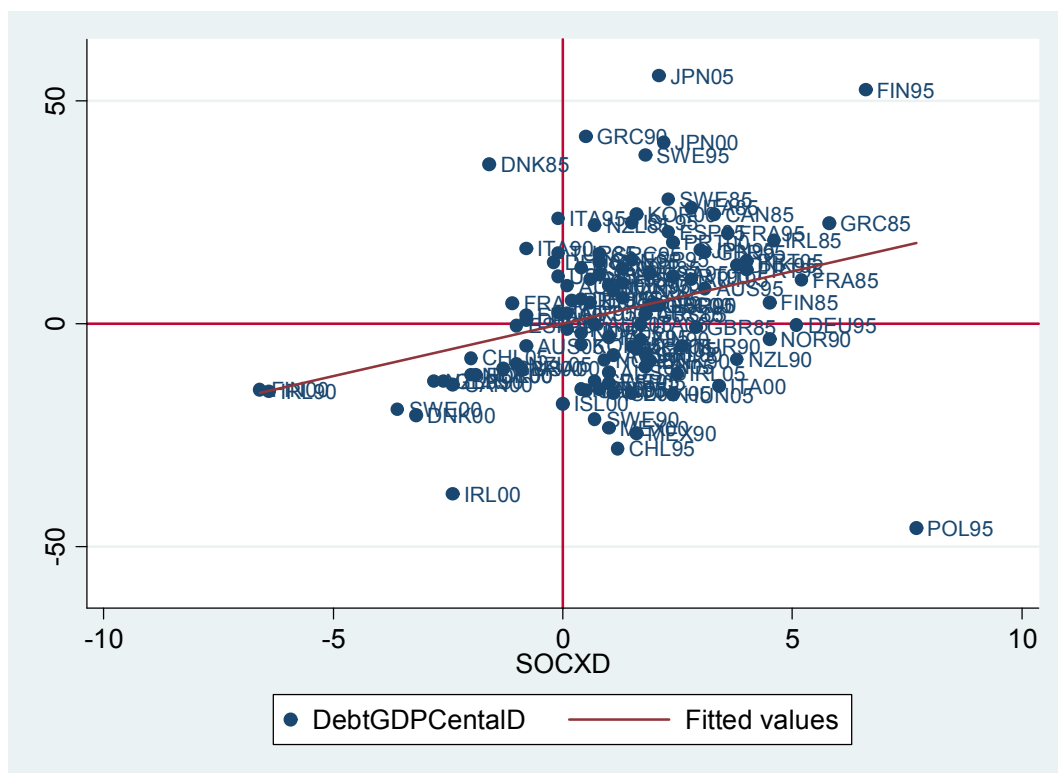
[그림 18]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간의 관계, OECD A-I 1985-2007



[그림 19]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간의 관계, OECD J-U 1985-2007



[그림 20] 사회복지지출 변화량과 국가채무 변화량간의 관계, 5년 단위 변화 OECD



5. 요약 및 정책 방향

(1) 요약

본 보고서는 재정건전성과 경제위기 간의 관계를 문헌 조사, 기초 통계 분석, 사례 분석, 회귀 분석 등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재정규모, 지출구성, 세수구성 등의 재정변수들과 경제성장, 경기변동, 경제위기 등의 거시 경제변수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여러 문헌들이 있으며, 이들 문헌들의 주요 결과는 재정건전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재정규모가 큰 국가에서 경기변동이 작으며, 교육과 R&D 등에 대한 지출이 성장친화적이며,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핵심 주제인 재정건전성으로부터 경제위기로의 인과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는 오랜 시기 동안 여러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국가별로 상이한 수준과 추이를 보이고 있다. 북구 국가와 캐나다 등은 재정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도 하였으며, 그리스와 같은 국가들은 재정건전성이 장기간에 걸쳐 훼손되기도 하였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와 국채 비율간의 상관관계는 동시의 값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는 이전 기간의 국채 비율과는 강한 관계를 가지지 않고 이후의 국채 비율과는 매우 강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에서 재정건전성 훼손으로의 인과관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재정위기보다 은행위기가 이후의 국채 비율과 보다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에서 국채비율로의 인과관계를 통제하기 위한 시도로 위기 발생이후 1-5년간의 관찰점을 표본에서 제외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재정건전성이 낮은 국가와 시기에 재정위기와 은행 위기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음이 관찰되었다.

최근의 남유럽 재정위기와 1980년대의 남미 재정위기에 대한 사례분석에서, 국가채무 수준으로 살펴본 재정건전성이 훼손된 국가들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였음에 대한 사례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유럽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등의 국가들의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독일과 북구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 각각 복지제도 개혁을 통해 복지지출을 낮추고 성공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킨 국가들이었음이 관찰되었다. 향후 재정건전성이 위기 발생의 요인뿐 아니라 위기 극복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위기 이전과 이후의 성장률을 위기 이전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엄밀한 사례 분석, 문헌 분석도 추가될 것이다.

재정건전성과 복지지출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두 변수의 수준과 변화량 각각에 대해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관찰되었다. 사례분석에서 현재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는 포르투갈, 그리스, 이태리 등에서 1995년과 2007년 사이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음이 관찰되었다. 이중 포르투갈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관찰되었으며, 그리스와 이태리의 경우 1995년에 이미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어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재정건전성의 악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사례분석에서 오히려 더 중요한 관찰은 복지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시킨 사례들이다. 1990년대초 북구 국가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으며, 2000년대초 독일도 복지개혁과 재정건전성 개선을 경험하였다.

(2) 정책 방향

①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제도

우리나라의 특성이 반영된 복지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복지제도는 단선적인 구조가 아닌 국가별로 그룹별로 다른 발전경로를 취하고 있다. 우리가 벤치마크해야 할 대상으로 북구 보다는 독일형과 미국형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족중심, 사회보험 중심의 모형이다. 사회서비스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무상이 아닌 차등가격으로 재원이 조달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북구 모형은 소규모 국가, 공동체 모형이며, 우리나라에 잘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독일이 보다 우리와 여건이 유사하다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 가족 중심, 분단 국가 경험이라는 요소들이 유사하다.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각각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보험은 보험으로서의 성격이 견지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소득재분배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무상의료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부족한 부분은 사회서비스이다. 아동보육은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조기개입의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전체 무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 향후 노인 돌봄에 대한 수요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② 근로친화적인 복지제도

근로장려세제, 사회보장료 감면을 포함한 임금보조금, 근로 조건 부과, 실업수당제도 개선 등 근로친화적인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재정건전성 유지 원칙

나라 빚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원칙이 천명될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나라 빚을 내서 복지를 확대하는 경우 제 2의 필리핀, 그리스, 아르헨티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해 보이나, 공기업 부채 등 재정건전성이 실제로는 수치보다 양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나타날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이다.

④ 교육/노동/복지의 종합적 접근

복지에 있어서 근로친화적인 요소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기초생보는 2011년 개선되었으나 근로의욕을 강하게 저해하고 있다.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의료 급여도 분리하는 이행급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근로장려세제, 고용친화적 기업세제도 필요하다. 물질자본 중심에서 인적자본 중심 세제 지원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아동에 있어서 교육과 돌봄은 분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함께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다. 취학이후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종일돌봄, 지역아동센터)할 것으로 판단된다.

⑤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제도의 확대보다는 사각지대 해소가 더 중요한 문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있어 매우 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무상의료보다는 사각지대 해소가 더 시급한 문제로 판단된다.

⑥ 사회서비스는 무상이 아닌 차등가격으로 접근해야 함.

무상서비스보다는 차등가격이 바람직하다. 차등가격이 선진국에서 사용되는 제도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사회서비스의 경우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민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예를 들어 대학교 등록금)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개입은 왜곡을 크게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가격규제가 아닌 소득보전(교육의 경우 소득연동 국가장학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인효과(stigma)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급식은 학생증으로 받고 재원 부담은 전산화하여서 정부가 재정부담과 본인부담이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할 수 있다.

⑦ 수요자 중심의 접근

공급자 중심의 접근은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고 중복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낮으며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이러한 형태이며, 부처내 과별로도 소통이 되지 못하여 유사한 제도가 중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자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망(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교육관련 전산망과도 연계)을 만들고 재정지원을 공급자 지원이 아닌 수요자 지원 형태가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으로 3,000억원 가량의 예산 효율화가 달성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영선(2011). OECD 국가의 국가채무와 복지재정의 상관성에 대한 토론.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Aiginger, Karl, "The Current Economic Crisis: Causes, Cures and Consequences", WIFO Working Papers, No. 341 August 2009.
- Barro, Robert J., 1996. Determinants of Economic Growth: A Cross Country Empirical Study. NBER, Cambridge.
- Claessens, Stijn, Ceyla Pazarbasioglu, Luc Laeven, Marc Dobler, Fabian Valencia, Oana Nedelescu, and Katharine Seal. "Crisis Management and Resolution: Early Lessons from the Financial Crisis". IMF Staff Discussion Note March 09, 2011.
- Fatas, A. and Mihov, I. (2001), 'Government size and automatic stabilizers: international and intranational evidenc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55, pp. 3.28.
- Hur, Seok-Kyun, Shikha Jha, Donghyun Park and Pilipinas Quising(2010). Did Fiscal Stimulus Lift Developing Asia out of the Global Crisis? A Preliminary Empirical Investigation, ADB Working Papers #215.
- Lee, Young and Taeyoon Sung. "Fiscal Policy, Business Cycles and Economic Stabilization: Evidence from Industrial and Developing Countries," *Fiscal Studies*, vol. 28 no. 4, pp. 437-462, December 2007.
- Lee, Young and Roger Gordon. "Tax 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89 no. 5-6, pp. 1027-1043. June 2005.
- Radelet, Steven; Sachs, Jeffrey; Cooper, Richard, and Barry Bosworth. (1998), *The East Asian Financial Crisis: Diagnosis, Remedies, Prospects*.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vol. 1998, No.1, pp. 1-90.
- Reinhart, Carmen M. and Kenneth S. Rogoff (2008). Is the 2007 U.S. Sub-Prime Financial Crisis So Different? An International Historical Comparison.
- Reinhart, Carmen M. and Kenneth S. Rogoff (2009a). "The Aftermath of Financial Crises", NBER Working Paper No. 14656, January 2009.
- Reinhart, Carmen M. and Kenneth S. Rogoff (2010). "Growth in a Time of Debt." *NBER Working Papers*, No. 15639.
- Rogoff, Kenneth S. and Carmen M. Reinhart(2009). *This time is different: Eight centuries of financial folly*, Princeton University Press.